

독자권익위원 칼럼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8% 내외를 차지하고, 연관산업(건설 자재, 건설 기계, 건설 기술 등)까지 고려하면 그 비중은 15%까지 확대되는 주요 산업으로 국가적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경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 건설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기상황이 비수도권인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건설업 폐업 신고건수가 1088건을 기록했는데, 비수도권 업체가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31.2%나 급증했다.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 그리고 PF 심사 강화까지 겹치면서 지방 건설업체는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 폐업 신고사유 중 88.1%가 '사업포기'였다는 점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사업영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 가운데서도 광주·전남 위기상황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상징적 현상이 광주와 전남 지역 주택건설업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2023~2024 폐업신고 건수가 신규등록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기고

김승남

광주시도시공사 사장



최근 국회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은 필자가 지난 2021년 11월,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벼랑 끝에 몰린 농촌 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절박한 심정으로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다. 무려 4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법안 발의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삼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절대농지 보전이라는 굳건한 원칙을 고수하던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오랜 시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과 농촌 살리기를 향한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맺은 점에 대해 가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과거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일방적인 농촌 태양광은 외부 거대 자본이 농지를 잠식하고 발전 수익마저 외지인들이 독식하며 지역 주민과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엔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은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혁신적 패러다임이다.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기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2022년 전까지는 폐업보다 신규 등록 건수가 많았지만, 2023년부터 역전했다. 이처럼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술한 분양시장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광주와 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각각 1234가구와 3598가구에 달한다. 동시에 주택가격도 맥을 못추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1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광주와 전남은 전년보다 각각 1.07%, 0.06% 하락했다. 0.18% 상승한 전국 평균치에 대비된다. 지방건설업 위기의 또 다른 실례로 2025년 12월 기준, 비수도권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기대비 75%로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된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주원인이다. 인구가 유입된 수도권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유출된 비수도권은 어려움 수밖에 없다. 그 위에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부진과 금융비용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3기 신도시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수도권 대형 프로젝트와 대비된다. 동시에 중앙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시행한 대출규제 조치로 인해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가 강화됨으로써 미분양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자금난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이 인구감소로 인한 미분양 등의 부동산 침체에다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최대 관심은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 전국토가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지방의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소홀한 점은 불균형적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27대책(대출 규제)을 시작으로 9·7대책(135만호 주택 공급), 그리고 올해 1·29대책(보타 세분화된 주택 공급) 등 3차례에 걸친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 법하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난 해 8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 완화, 약성 미분양 취득세 감면, 공공매입 확대로 지방 부동산 수요 진작' 등의 대책을 제시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상이 전국적이고, 대형 건설기업에만 해당될 것 같은 시책보다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정부가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과 부합할 것이라 확신한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가 유동적 대출 규제라 생각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출을 규제하다보니 인구부족으로 분양이 안되어 폐업위기에 몰린 지방건설사의 자금난이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차별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방 건설 활성화를 중앙정부에만 의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의 건설산업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라는 중앙정부의 재인식, 지자체의 건설산업 중요성 재인식, 그리고 당사자 격인 지방건설사들의 처절한 자구적 노력이 함께 하는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기대해 본다.

'영농형 태양광', 광주·전남 미래 비춰주길

존의 영농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표가 그 경제적 효용을 증명한다. 2300여㎡(약 700평) 남짓한 면적에서 100kW 규모의 설비를 가동할 경우, 벼농사 대비 최대 5배에 달하는 연간 1000만원 안팎의 부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는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가에 매일 안정적인 '햇빛 연금'을 제공하는 든든한 동아줄이자, 국가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거시적 해법이다. 물론 목직인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영세한 임차농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오직 발전 수익만을 노린 이른바 가짜 농민이 양산되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식량 안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우 타당한 걱정이다. 그렇기에 이번 제정안이 발전사업의 주체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주민참여 협동조합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식량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시의적절한 안전장치라 평가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웃 일본의 선례를 날카롭게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작물 생육을 위한 차광을 상한선 설정,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보장하는 설비 높이(3m 이상) 의무화 등 정교한 물리적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확량이 지역 평균의 80%에 미달하거나 경작 의무를

계을리할 경우, 즉각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설비를 철거하는 등 강력한 사후 관리 감독 제도를 병행해야만 농업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다. 인프라 확충과 구조적 난제 해결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30년까지 2500곳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청사진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력망 확보가 절대적이다. 현재 급증하는 출력제한(발전 제한)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막대한 설치 및 유지 비용을 개별 농가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전력 등 공공 영역이 주도하여 중앙 집중형 전력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쏟아질 태양광 폐패널의 친환경적 처리 방안 함께, 값싼 외산 자재 무분별 유입으로 인한 설비 내구성 저하를 막기 위해 엄격한 규격을 통과한 검증된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 조달 인증제 도입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풍부한 일사량과 광활한 농지를 보유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절대적 최적지다. 이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혁신을 이끄는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척박한 땅에 심은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마침내 광주·전남의 너른 들녘 위에서 눈부신 미래 산업의 꽃으로 만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설

전남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지원 절실

전남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이 총체적 위기다. 여수 국가 산업단지 중심의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다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중동 약재까지 겹친 상태다. 광양시 전체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산업은 보호무역주의 대두,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 설비 노후화와 원가 부담 등으로 국내 수요까지 급감하면서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위기는 곧바로 지역소비, 고용, 투자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돼 가고 있다. 정부로부터 금융·재정·고용·연구개발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하다. 전남도가 이들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우선 물류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만권 중소 철강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했다. 또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여수·광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국비 40억5000만원 등 5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 최대 1억원이었던 기업당 지원 규모를 1억500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할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의 원료 다변화를 위한 생산장비 개조, 철강기업의 물류 인프라 개선 등 생산비 절감과 공정 효율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어 이들 산업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기술 고도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소부장 생태계의 기틀을 닦은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연계한 융합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업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들 산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효과 크다'

나주시가 시행중인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이하 100원 버스)' 효과가 크다. 도입 1년만에 버스 이용률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 이동권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원 버스는 나주시가 지난해 3월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을 통한 교육·교통비 부담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교통복지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만 6~18세의 어린이·청소년은 관내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마을·급행·순환·콜버스 등 모든 버스를 현금 100원 또는 교통카드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이 어린이 750원, 청소년 1200원이었던 상황에서 이번 100원 버스 시행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은 크게 완화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버스이용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현금과 교통카드 둘 다 이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교통카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나주시가 최근 100원 버스 도입 1년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기준 청소년과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시행 효과를 수치로 확인한 사례로 단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교통비 부담 완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실제로 등·하교뿐 아니라 학원, 문화, 여가 활동 등 일상 이동 전반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 또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운영, 이용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과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배차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 등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나주시의 100원 버스가 시행 1년여만에 체감도 높은 교통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취재수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악플'

임영진 사회부 차장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은 전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현장에서는 또래 남학생 한 명이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 피해자를 도우려 했다. 남학생은 맨손으로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과 목 등을 크게 다쳤고, 전북대병원에서 긴급 봉합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자칫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상처가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구조에 나선 학생을 향해 "왜 도망가지 않았냐", "혼자 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식의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추측을 쏟아냈다. 당시 현장에서 어떤 공포와 혼란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해

나 공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국 피해 학생은 범죄로 한 번, 악성 댓글로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 익명성 뒤에 숨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은 누군가에게는 오래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특히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선던 학생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광주경찰청이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 게시물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조롱·비난성 댓글과 인격 모독 표현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방침이다. 악성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한 장난이나 의견 표현 정도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누군기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를 보내는 일이다.

독자투고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안전 위협

최근 고환율과 고유가로 시름하는 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가 물류업계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통행료 면제를 맞추기 위한 '거북이 운행'이 반복된다. 고속도로 본선과 틀게이트 인근에 저속 주행 차량이 늘어섬어 정체가 발생하고, 교통 흐름은 급격히 불안정해진다. 법으로 보장된 휴식도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시간에 쫓긴 운행이 휴식보다 우선되면서 안전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특정 시간대 일괄 면제 방식은 교통을 왜곡하고 위험을 키운다. 통행료 및 만원을 아끼려다 더 큰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 없는 지원은 정책이 아니다. 면제시간을 더 넓게 분산하고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운행기록장치(DTG)와 연계해 총 주행 휴식을 취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시급해 보인다. 도로는 경제의 혈액이지만 우리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임승환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4팀장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채 부 370-7020 산 일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세 율 지 사 0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